

역사로서의 평양 선언과 북일 관계*

조진구**

평양 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미수교국인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그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북일 양국 정상이 서명한 평양 선언은 북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문서로 전문에서 양국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 즉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역사로서의 북일 평양 선언의 정치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난 20여 년 사이에 일본의 대북 기본방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해왔으며, 평양 선언에 대한 북일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평양 선언의 이행이 왜 미완으로 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평양 선언, 북일 관계,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 김정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김정은, 기사다 후미오

* 이 연구결과물은 2022학년도 경남대학교 대학특성화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세 분 심사위원의 유익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1. 서론: 문제의식,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미수교국인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평양 선언이 발표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북일 양국 정상이 서명한 평양 선언은 북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문서로 전문에서 양국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 즉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한과의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초대 일본 측 수석대표를 했던 나가히라 노보루(中平立)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¹⁾ 평양 선언은 내용 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양측 주장이 대립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북한 입장을 수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2014년 5월 29일 발표된 소위 ‘스톡홀름 합의’에서도 북일 “쌍방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평양 선언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평양 선언 20년이 되는 2022년 9월 15일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대사는 평양 선언을 “백지상태로 만들고 두 나라 관계를 최악의

1) “[緊急座談会]「小泉総理訪朝」への道程と日本外交,” 『国際問題』, No.512(2002.11), p.67.

대결국면에 몰아넣은” 책임을 일본 측에 돌렸다. 그렇지만, 평양 선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평양 선언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도 내비쳤다.

1965년 6월 22일 일본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 다음 날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은 ‘조선 인민의 막대한 배상 청구권’을 “단 몇 푼을 던져 주는 것으로 흥정”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일 배상 청구권을 보유”하며 일본은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²⁾ 그러나 북한은 평양 선언을 통해 ‘경제협력’ 방식을 수용했는데, 약 10년간의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일관해서 주장해 왔던 것을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폐기한 것이다. 이것은 납치 문제에서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 특유의 정치체제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 연구의 최대 난관은 자료의 제약이다. 북한 외교의 경우, 상대국 정부나 관련국의 외교문서를 활용함으로써 북한 내의 정책 결정이나 전개 과정 및 결과에 미친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³⁾ 관련국의 자료 공개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지만, 평양 선언은 문서 공개 연한이 아니다. 1990년 9월의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북일 간에 국교정상화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북한과의 교섭이 끝나지 않아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990년 11월의 예비회담부터

2) 『로동신문』, 1965년 6월 24일.

3) 예를 들면, 와카스기 미나코(若杉美奈子)는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입수한 사료를 가지고 1970년대 전반 북한이 중소에 의존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탈진영’ 외교를 전개하는 과정과 의미를 흥미롭게 분석했다. 若杉美奈子, “1970年代前半における北朝鮮「脱陣營」外交と政策展開過程,” 『アジア地域文化研究』, No.13(2017), pp.68-93.

1992년 11월 제8차 회담까지의 문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사료를 중시하는 일본 학계의 풍토 때문인지 2002년 9월의 북일정상회담이나 평양 선언을 정면으로 다룬 학술논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 논문과 직접 관계된 연구로는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교수의 논문과 마쓰모토 히데키(松本英樹)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오코노기의 논문은 1990년 9월의 일본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과 그 결과 시작된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가 실현된다면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작지 않지만, 북일 국교 정상화 후의 경제교류가 북한 정치체제의 내부 붕괴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흥미롭다. 마쓰모토의 논문은 북일 간 12차례 국교정상화회담의 경위, 북일정상회담과 평양 선언의 내용과 국내외의 평가 등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본 측 발표나 논고 등에 의존해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측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⁴⁾

이나하라 야스헤이(稲原泰平)는 국제법적으로 유엔 회원국인 북일 간 합의인 평양 선언은 일본이 구소련, 한국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할 때 체결한 문서와 동등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절차적, 실무적 문서로 볼 수 없지만, 내용 면에서 애초부터 북일 양국이 준수할 의사 없이 서로를 속이면서 서명했다면 국제법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냉소적으로 지적한다.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 냉전 종식 후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타

4) 小此木政夫, “日本の北朝鮮政策: 国交正常化交渉とその展望,” 『法学研究』, 第68卷 2号(1995), pp.95~110; 松本英樹,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経緯と朝鮮半島をめぐる最近の動向,” 『レファレンス』, 平成 15年 8月号(2003.8.), pp.31~52.

개를 위해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선택했으며, 이것은 자신들이 반대했던 실질적인 교차승인의 길을 의미해 북한의 대일 외교의 ‘일탈’이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후쿠하라는 대일 교섭에서 북한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의 무오류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주장, 인식, 교섭 스타일을 답습해 교섭의 타결을 어렵게 했으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강한 대응이 북한에 선택의 폭을 더욱 좁히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⁵⁾

일본의 전후처리 측면에서 보면, 후술하는 대로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재산청구권의 상호 포기과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은 북한의 양보로 해석되기도 한다. 오타 오사무(太田修)는 재산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은 과거의 진상규명과 사죄·보상을 요구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새로운 방침’은 2003년 9월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이후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타는 한일 국교 수립 당시 일본 사회가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의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포괄적인 기금 등의 조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소수파라 할 수 있다. 북일 교섭 일본 정부 대표를 했던 엔도 데쓰야(遠藤哲也)는 경제협력은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군 위안부, 강제 연행, 재조(在朝) 피폭자 등 개인적 피해는 이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는 “평양 선언과 그 바탕이 되는

5) 稲原泰平, “日朝平壤宣言(2002.9.17.)の国際法上の意義,” 『金沢星稜大学論集』, 第36巻 第3号(2003), pp.1~11; 福原裕二, “日朝「平壤宣言」への道 - 北朝鮮の「対日自主外交」の変容,” 『アジア社会文化研究』, 第5号(2004), pp.69~96.

일한(한일) 방식의 토대를 뒤엎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⁶⁾ 불미스러운 과거청산과 현안들의 해결을 통한 북일 관계 정상화를 담은 평양 선언을 둘러싸고는 북일 사이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 내에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북일 관계가 남북관계나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나아가 한국 외교 전반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내에는 좋은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료상의 제약은 한국 연구자에게도 공통된 것으로 외부 관찰자로서 의도하지 않은 사실 오인이나 무리한 해석이 아쉽게도 발견되기도 한다.

정영철은 평양 선언은 일본에 대한 북한 측의 대폭적인 양보로 가능했는데, 그 뒤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보상 즉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 것을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한다. 강태훈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경제협력 방식을 수용한 것은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했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2000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9차 회담에서 북한이 “식민지 보상으로 50억불 내지 100억불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언급했는데, 그 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⁷⁾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과 비밀교섭을 했던 다

6) 太田修, “日朝平壤宣言から一年 - 植民地支配・戦争による被害の清算のために, 歴史学からの提言,” 『文学部論集』, 第89号(2005), pp.1~12; 遠藤哲也, “〈報告 3〉日朝関係と国交正常化問題の現状と展望,”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特集号(2011), pp.65~71.

7)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157~184쪽; 강태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였던 X만이 아니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도 경제협력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었다고 증언했지만, 다나카가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 언급한 적은 없다.⁸⁾

윤경민이 국교 정상화를 위한 북일 간의 교섭과 정상회담을 국제 협상 비용과 국내적 정치 비용을 중심으로 양면 게임(Two-Level Game)의 관점에서 분석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도진순은 동북아와 국제적 구조 문제와 결합해 북일 간 교섭의 역사와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⁹⁾ 김용복은 평양 선언 이후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가 북한의 대일 협상력을 높여 북한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 유골 반환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의상도 평양 선언에서 청구권의 상호포기와 경제협력 방식에 북한이 동의했지만, 북한이 포기하게 될 청구권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개인 청구권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유의상은 타결이 쉽지 않은 다른 안건 교섭은 뒤로 미루고 먼저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해 국교 정상화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¹⁰⁾

『분쟁해결연구』, 제2권 1호(2004), 135쪽.

8) 増田剛, 『日朝極秘交渉: 田中均と[ミスターX]』(東京: 論創社, 2023), pp.82-83.

9) 윤경민,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78호(2022), 457-500쪽; 도진순, “동북아 탈냉전의 고리, 북일 수교교섭의 역사와 한계,”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6권(2005), 179-221쪽.

10) 김용복, “한일회담의 경험과 북일수교회담의 전망: 공개된 한일협상자료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1권(2006), 175-195쪽; 유의상, “북·일 수교회담 전망

평양 선언 발표가 20년밖에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로동신문』과 일본 신문을 1차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8월 도쿄에서 열린 제10차 회담 때까지 북한 측 수석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평양 선언의 의미는 이 회담의 부침의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평양 선언 20년이 되었던 2022년과 2023년 일본에서는 북일 관계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의 회고록과 증언 등을 담은 서적이 잇달아 출판되었다.¹¹⁾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의 저서로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다. 와다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납치 문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북일 국교 수립은 있을 수 없으며” “납치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 전원의 탈환을 요구”한다는 납치 3원칙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와다는 세 번째 원칙은 북한과의 ‘대화, 교섭, 해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 현 체제와의 교섭을 단념하고 압력을 가해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베의 ‘경솔하고 무책임하며 위험

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제23호(2018), 97~131쪽.

11) 山本栄二, 『北朝鮮外交回顧録』(東京: 筑摩書房, 2022); 有田芳生, 『北朝鮮拉致問題: 極秘文書から見える真実』(東京: 集英社, 2022); 増田剛, 『日朝極秘交渉: 田中均と[ミスターX]』(東京: 論創社, 2023); 安倍晋三, 『安倍晋三回顧録』(東京: 中央公論新社, 2023); 岩田明子, 『安倍晋三実録』(東京: 文藝春秋, 2023); 編集部・飯島勲, “初公開 2013年訪朝 北朝鮮首脳と「全7時間」極秘会談,” 『文藝春秋』, 第100卷 10號(2023), pp.94~147.

한' 행동이 북일 관계를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치와 외교에 위기를 초래했다고까지 혹평한다.¹²⁾

이 글에서는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1차 자료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역사화'한 북일 평양 선언의 정치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여 년 사이에 일본의 대북 기본방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했으며, 평양 선언에 대한 북일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평양 선언의 이행이 왜 미완으로 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북일, 잃어버린 기회 10년의 궤적

2004년 출판된 저서에서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는 북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2002년 이전에 북일 국교 정상화의 기회가 세 번 있었다고 지적한다. 정부 간 교섭이 없었던 195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초반과 달리 1990년 9월 자민당과 일본사회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 결과로 발표된 조선로동당과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북일 정부 사이에 국교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을 제외하고 과거 전쟁을 했거나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했던 일본으로서는 마지막 전후 처리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며, 간접 혐의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화물선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유럽에서의

12) 和田春樹, 『日朝交渉30年史』(東京: 筑摩書房, 2022);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일 교섭 30년』, 김윤형 옮김(파주: 서해문집, 2023). 이 글에서는 일본어판을 참고 하였음을 밝혀둔다.

냉전 종식과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북한은 ‘두 개 조선(한국)’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북일 국교 정상화에 소극적이었지만, 경제와 외교에서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북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던 일본사회당의 다나베 마코토(田辺誠) 부위원장은 1990년 9월 24일 자민당의 막후 실력자 가네마루 신(金丸信) 의원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26일 김일성과 만난 가네마루는 가 이후 도시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보낸 친서를 전달했는데, 친서는 ‘총리로서의 사죄’하는 북한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9월 27일 자 『로동신문』은 ‘반성과 유감’을 ‘사죄와 반성’으로 바꿔 실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가네마루를 만난 김용순 당 국제 담당 비서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본 측은 북한의 중요한 정책 변경으로 이해했다. 김용순은 식민지배 시기만이 아니라 전후 45년도 보상해야 하며, “정상화 이전에 먼저 선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일본 측을 압박했다.¹³⁾ 한소 수교 이틀 전인 9월 28일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3당은 식민지배로 인해 일본이 끼친 ‘커다란 불행과 재난’과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해 일본은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 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빨리 국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정부 간 교섭을 11월 중에 시작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가네마루의 독단적 판단으로 포함된 전후 45년 배상은 일본 국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3) 高崎宗司, 『検証 日朝交渉』(東京: 平凡社, 2004), pp.14~39; 『朝日新聞』, 2022年 3月 26日(석간).

가네마루는 한국을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해야 했다.¹⁴⁾

3당 공동선언 제7항에 따라 '조일국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교섭의 일환'으로 외교 당국 '국장급 예비회담'이 1990년 11월 3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렸다. 북한 측은 주진극 제1국장이 일본 측은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아시아국 국장이 단장을 맡았는데, 12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의견일치'를 보고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 토의기록'이라는 '합의문건'을 채택했다.¹⁵⁾ 북일 양측은 1991년 1월 하순에 평양에서 첫 번째 본회담을 개최한 뒤 2차는 도쿄에서 3차 이후는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부부장(차관)급이 단장(수석대표)을 맡기로 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제로 나눠 협의하기로 했다.¹⁶⁾

- (1) 조일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 (2) 조일국교정상화에 따르는 경제적 제 문제
- (3) 조일국교정상화와 관련한 국제문제
- (4)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제 문제(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일본인 배우자 등)

14) 『로동신문』, 1990년 9월 29일; 高崎宗司, 『検証 日朝交渉』, pp.33~35. 10월 8일 가네마루를 만난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남북대화나 교류의 의미 있는 진전과의 연계 등 한국 정부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1990년 10월 9일.

15) 제1차 예비회담은 11월 3일과 4일, 제2차 예비회담은 11월 17일, 그리고 제3차 예비회담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의 북한과 일본대사관을 오가며 개최되었다.

16) 『로동신문』, 1990년 12월 18일.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전후 45년 보상 문제는 두 번째 의제에서, 일본이 의제화할 것을 요구한 북한 핵사찰 문제는 세 번째 의제에서 다루기로 양측이 타협한 것인데,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본회담의 경과를 상세하게 보도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991년 1월 30일 역사적인 북일 정부 간 공식 회담이 시작되고 회담을 마치면서 차기 회담 일정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 11월 초까지 8번 회담이 열렸지만, 일본이 북한 핵문제와 정체불명의 일본인 여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0년 4월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약 7년 5개월 정도 중단되었다. 평양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개 의제에 대해 북일이 어떤 견해를 밝히고 상대방 주장에 반론했으며, 합의에 이른 것은 무엇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차 회담 첫날 회의를 마친 전인철 북한 측 단장은 1월 30일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 (1)과 (2)에 관한 북한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전인철은 우선 과거 식민지배로 일본이 끼친 '재난과 손실'에 대해 '일본 국가 및 정부 최고 당국자의 공식적인 사죄'가 필요하고,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해 일본이 강요한 모든 조약과 협정들이 '비법(불법)·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과거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이며, 과거 청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두상 또는 문건상의 사죄'와 함께 그에 '상응한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하며, 보상 문제는 '교전국간의 배상형태와 재산청구권형태의 두가지를 다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일본은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보급, 공격, 수리 기지' 역할을 하고 미국과 함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취해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서 전후 45년간의 '막대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해방 후 과거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조선에 대한 침략과 강점 그 자체가 비법(불법)적”이었고 “조선 로동자들과 인민의 로동력과 고향을 짜낸” 일본은 어떠한 ‘재산청구권’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넷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담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는 북일 간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나 북한은 이를 거부한 적이 없고 IAEA와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져 언제라도 협정에 조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¹⁷⁾

이에 대해 나카히라 노보루 수석대표는 식민지 시기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북한과 일본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아 배상과 보상에 응할 수 없고 북일 간에는 재산청구권 문제만 미해결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나카히라는 일본 정부는 3당 공동선언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는 한일기본조약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카히라는 3월 11일과 12일 도쿄에서 열린 제2차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설명했는데, 북한이 불법·무효임을 주장했던 병합조약은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후 45년간의 비정상적인 북일 관계는 냉전과 북한의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책임은 없고 보상할 뜻도 없다고 했다.¹⁸⁾

1, 2차 회담에서 표명된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음에도 전인철은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견해차는 “쌍방의 공

17) 『로동신문』, 1991년 1월 31일 및 2월 1일.

18) 松本英樹,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経緯と朝鮮半島をめぐる最近の動向,” 『レファレンス』, 平成 15年 8月号(2003.8.), p.33 및 p.35의 <표 3> 참조.

동의 노력에 의하여 능히 극복될 수 있고 공통점과 합의를 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¹⁹⁾ 북한은 3월 중순에 예정된 팀스 피릿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도 북일 회담은 예정대로 개최했다. 일본과의 회담에 거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 일 것이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기존 주장을 버리고 북일 국교 정상화는 휴전선 북측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북한과의 정상화라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회담의 순조로운 진척을 위해 네 가지 의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협의하지 말고 첫 번째 의제부터 순서대로 협의하고 합의를 본 뒤 다음 의제로 넘어가자는 ‘중요한 제안’을 했다.²⁰⁾ 이것은 3차 회담을 앞둔 2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김용순이 북일 교섭의 연내 타결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하는 방법이나 의제 순서에 따라 협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²¹⁾ 이에 대해 일본은 종전대로 네 가지 의제의 포괄적 협의를 ‘고집’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는 외교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말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다. 나아가 일본은 북한의 보상 요구는 국제법에 반하고 재산청구권 범위 내에서 ‘증거문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전후 45년의 보상 문제도 일본에 책임이 없다고 거부했다. 더구나 일본이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의 범인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일본인 여성, 즉 ‘정체모를 일본녀성’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서 회담은 차기 일정도 합의하지

19) 『로동신문』, 1991년 3월 12일.

20) 『로동신문』, 1991년 5월 21일.

21) 小此木政夫, “日本の北朝鮮政策: 国交正常化交渉とその展望,” p. 101.

못하고 끝났다.²²⁾

북일 회담은 파행이 계속되어 8월 30일 예정된 4차 회담은 31일 오후에야 열렸다. 일본 측은 8개 항으로 구성된 '일조(북일)기본조약'의 골자를 제시했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유감' 표명에 걸쳐 '사죄'는 빠졌다. 병합조약에 대해서도 한일기본조약에 있는 '이미 무효'라는 표현이 들어가 무효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4차 회담도 평행선을 긋고 끝났다. 11월 18일 재개된 5차 회담에서 북한은 '선린우호조약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하지만,²³⁾ 『로동신문』에 실린 전인철 수석대표의 발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1월 19일 전인철은 북한이 말하는 보상이란 식민지 통치를 강요함으로써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인적, 물질 피해와 불행과 고통을 준 데 대한 보상"이며, "인적 및 물질 피해에 대한 객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법률적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북한이 주장했던 교전국 간의 배상이나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²⁴⁾ 이것이 종전 입장을 버리고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면 일본과의 교섭에 속도를 내려던 북한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1991년 7월 30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1992년 말까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소유 금지, 핵무기 배비와 통과, 군사 연습 금지, 남북에 대한 사찰 등을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²⁵⁾ 한미의 대응

22) 『로동신문』, 1991년 5월 22일 및 23일.

23) 高崎宗司, 『檢証 日朝交渉』, pp.54~55, p.58.

24) 『로동신문』, 1991년 11월 20일.

25) 『로동신문』, 1991년 7월 30일.

도 빨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월 27일 해외 배치 모든 전술핵무기의 철수 의사를 발표했다.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으며, 12월 18일에는 "이 시각 우리나라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²⁶⁾ 이에 앞서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데 이어 31일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1992년 1월 30일 북한의 홍근표 원자력공업부 부부장과 한스 브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으며,²⁷⁾ 베이징에서는 북일 간 6차 국교 정상화 회담이 개최되었다. 전인철은 일본이 국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유엔 가입 문제, 남북대화, 핵사찰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면서 북한의 보상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외교 관계를 먼저 설정한 뒤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는 북측 제안을 거부했는데, 전인철은 일본의 과도한 플루토늄 보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²⁸⁾

전인철 사망 후 이삼로가 북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7차 회담은 5월 13일부터 3일간 열렸는데, 14일 회담에서 이삼로는 재산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 사실 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일본 측 주장

26) 대통령공보비서실, 『노태우 대통령 4년의 주요연설』(서울: 동화출판공사, 1992), 440~441, 451쪽.

27) 『조선일보』, 1992년 1월 31일.

28) 『로동신문』, 1992년 1월 31일~2월 2일.

을 비판하면서 ‘한일협정’ 방식인 ‘재산청구권’론으로 과거를 청산하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²⁹⁾ 한중 수교 후 거의 6개월 만인 11월 5일 하루만 열린 8차 회담에서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 더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정체불명의 일본인 여성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북한은 회담을 ‘결렬’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결렬’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11월 6일 북한은 대표단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보상이라는 회담의 본질을 외면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³⁰⁾

1995년 3월과 1997년 11월 일본의 연립여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중단된 국교 정상화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 1997년 11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을 만난 김용순은 처음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³¹⁾ 일본 국내에서는 1997년 2월 3일 보수적인 『산케이신문(産経新聞)』과 진보적 시사주간지 *AERA*에 14세의 소녀 요코다 메구미의 납치 의혹이 보도되면서 북한에 대한 일본 내의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교섭 중단과 직항 전세기의 운항 중지 등의 독자 제재를 결정하고 한반도에 너지개발기구(KEDO)에의 자금협력도 보류했다.

1999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를 비롯한 초당파 의원단에 김용순 비서가 납치 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하는 데 동의하자 2000년 3월 7일 일본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

29) 『로동신문』, 1992년 5월 15일.

30) 『로동신문』, 1992년 11월 6, 7일.

31) 和田春樹, 『日朝交渉30年史』, p.71.

한 쌀 10만 톤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4월 5일 평양에서 9차 회담이 7년 5개월 만에 재개되었으며, 7일 회담을 마치면서 국교 정상화 실현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공동 보도'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³²⁾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7월 26일 방콕에서 사상 처음 열린 북일 외상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0차 회담이 8월 21일 도쿄에서 열려 24일 '공동보도문'을 내고 끝났다. 그러나 북한의 정태화 대사는 일제의 침략과 군사적 강점이 '적법'했다는 '강도적인 논리'에 기초한 '재산청구권' 방식으로 보상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태화는 아시아 국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 15일 발표)에 포함된 사죄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양측 주장은 정면으로 대립했다.³³⁾

특히,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의 경제협력 방식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협력 방식의 기성사실화를 의도했을지 모른다. 북한은 1992년 11월의 8차 회담을 끝내면서 경제협력 방식의 수용 여부에 관한 장고에 들어갔던 것과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관심이 식어 갔다. 10월 6일 일본은 WFP 요청의 두 배가 넘는 50만 톤의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으며, 10월 30일과 31일 베이징에서 11차 회담이 열렸으나 이전과 달리 『로동신문』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11차 회담에서 북한은 강경하게 나왔다고 하며,³⁴⁾ 심지어 북한은 회담 직전에 내용을 발표하면 교섭을 중단하겠

32) 和田春樹, 『日朝交渉30年史』, pp.73~78; 『로동신문』, 2000년 4월 8일.

33) 『로동신문』, 2000년 8월 25일.

34) 山本榮二, 『北朝鮮外交回顧録』, pp.194~195.

다고 주장했다고 한다.³⁵⁾

이상 살펴본 대로 1990년 11월 초의 예비회담에서 2000년 10월 말의 11차 회담까지 10년 동안 열린 북일 정부 간 회담에서 제시된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대로 과거 청산을 하려면 일본 정부 최고책임자의 공식 사죄가 필요하고 이를 공식문서에 명기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이 구 조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의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셋째, 5차 회담에서 북한은 교전국 간의 배상과 전후 45년의 보상에 관해 언급하지 않기 시작했지만, 한일 간의 경제협력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³⁶⁾ 넷째, 북한은 ‘납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는 약속했다. 반면에 북한은 와다 하루키가 지적하듯이 일본이 중시하는 납치 문제 논의를 거부해서는 일본과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고 보상이나 배상의 형식을 고집하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일본 국내의 강한 비판을 고려하면 공개적인 회담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³⁷⁾ 그러나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춰 보면 이 문제는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35) 高崎宗司, 『檢証 日朝交渉』, p.156.

36) 일본 자료를 바탕으로 마쓰모토 히데키가 작성한 표에 따르면, 10차 회담에서 북한은 한일 방식(경제협력 방식)에 대해 “점점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松本英樹,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経緯と朝鮮半島をめぐる最近の動向,” p.35 <표 3>.

37) 『和田春樹』, 『日朝交渉30年史』, pp.84~85.

3. 북일 정상회담과 평양 선언의 정치적 의미

2002년 8월 30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전격적인 총리의 방북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북일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납치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³⁸⁾ 약 1년에 걸친 사전 비밀교섭에서 북한은 총리 방북 이전에 납치 사실을 인정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9월 14일 교도통신사의 사이타 이치로(齋田一路) 사장에게 보낸 서면 인터뷰 답변서에서 김정일도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의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으며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강조는 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일은 고이즈미 방북이 관계 정상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북일 관계 정상화의 기본문제는 “두 나라 사이에 엉켜있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 의해 우리 인민이 당한 온갖 재난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성근하게 사죄도 하고 보상문제도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일은 “지금 크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시비하고 서로 발목이 묶이워있는데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되고 호상 신뢰가 조성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답변했다.³⁹⁾ ‘크지 않은 문제들’은 납치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38) 8월 31일과 9월 1일 『아사히신문』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북일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지만, 납치 문제의 ‘해명(解明)’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한 사람은 28%에 지나지 않았다. 『朝日新聞』, 2002년 9월 3일.

데, 이때까지 김정일은 납치 문제가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일본 측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행방불명자’ 가운데 8명은 사망하고 5명은 생존해 있다고 전달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납치는 일본에 의한 낚조라는 종전 주장을 버리고 처음으로 납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관련자 처벌과 사실 관계 조사 및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평양 선언은 전문에서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네 개 항으로 구성된 본문에는 국교정상화회담의 2002년 10월 중 재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및 보상,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 즉 납치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 문제의 관련 국가 간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을 담고 있었다.⁴⁰⁾

9월 18일 실시한 『아사히신문』의 긴급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북일 정상회담을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10월 중의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58%가 ‘찬성’하고(‘반대’ 28%) ‘북한과 국교를 맺는 게 좋다’는 응답자도 60%에 달했다.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 61%였지만, 8명 사망, 5명 생존이라는 북한 측의 통보는 충격적이었으며 신문과 TV에서 거의 매일 납치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했다.⁴¹⁾

39) “共同通信社社長書面インタビュー 金正日総書記の回答”(2002.9.14.); “일본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주체91(2002)년 9월 14일], 『김정일 선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301~303쪽. 인용은 북한 자료.

40) 『로동신문』, 2002년 9월 18일.

일본 정부는 10월 9일 납치 문제를 '최우선사항'으로 다루며 평양 선언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북한 측의 성의를 보면서 국교 정상화 교섭을 추진한다는 '일조 교섭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⁴²⁾ 바로 전날(8일) 북한은 생존 피해자 5명의 '일시 귀국'을 통보했으며, 이에 일본 측이 동의해 10월 15일 5명이 일시 귀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약속을 깨고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조기 귀국을 요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10월 29일과 30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재개된 12차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일본 측은 생존 피해자 자녀의 조기 귀국 일정을 확정하도록 요구했지만, 북한은 납치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반박하면서 약속대로 5명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북한은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 문제를 먼저 협의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납치 문제와 핵 문제가 최우선사항이라고 반론하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없이 과거 청산을 위한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⁴³⁾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며, 11월 초 국회에서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은 평양 선언은 "(일본이) 담고자 했던 모든 것이 포함된"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요한 정치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 교섭은 타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⁴⁴⁾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41) 『朝日新聞』, 2002年 9月 19日.

42) 松本英樹,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経緯と朝鮮半島をめぐる最近の動向," <표 4> 참조.

43) 高崎宗司, 『検証 日朝交渉』, pp.185~186.

44) 松本英樹,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経緯と朝鮮半島をめぐる最近の動向," p.37.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는 일본 측 주장이 관철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외교가 거둔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평양 선언을 통해 북한은 무엇을 얻고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김정일의 결단으로 북한은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고수했던 자국 입장을 버리고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방식을 고집하던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즉, 북일 양국 간의 모든 재산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국교 정상화 후에 일본이 북한에 무상자금협력, 저리의 장기차관,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용자 및 신용대부 등의 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을 인민들에게 강요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일본의 경제협력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었다. 문제는 평양 선언으로 북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중단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며,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도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제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양국 간 현안의 해결 없이 불가능하다는 구도가 평양 선언을 통해 만들어졌다. 현안이 해결되어도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실무자들이 견지했던 북한 측 입장이 최고지도자의 결단으로 한꺼번에 뒤바뀌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본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평양 선언을 통해 북한은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협의를 약속했다. 고이즈미 방북 직후인 10월 초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에게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HEU(고농축 우라늄)를 이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계기로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게 된다. 12월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핵동결의 해제를 선언한 데 이어 2003년 1월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3월 8일 중국의 첸지천(錢其琛)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설득한 결과 4월 하순 베이징에서 북한, 미국, 중국에 의한 3자회담이 열린 데 이어 8월 하순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열렸으며, 이를 계기로 북일 양국 대표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왔던 납치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북한은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경제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납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국 사이에 최소한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특히, 2003년 5월 23일 예정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현재화한다. 대화를 중시하는 다나카 히토시 외무심의관은 ‘압력’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자극할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가 ‘압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자 배석한 아베 관방부 장관이 사전에 준비된 자료의 ‘압력’에 붉은 선을 그어 전달하고 나서야 고이즈미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강경파 아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북일 간의 불신은 깊어지고 납치피해자 가족의 귀국 문제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민당 간사장이 된 아베는 10월 7일 당내에 ‘북한에 의한 납치 문

제 대책반'을 설치하고 본부장이 되어 외환 및 외국 무역법(外国為替及
 び外国貿易法, 외환법)의 개정을 주도했으며, 2004년 2월 9일 개정된 외
 환법에 의해 일본은 북한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가 가능하게 되었다.⁴⁵⁾ 2월 11일 평양을 방문한 다나카 외무심의관에
 게 강석주 제1부상은 외환법의 개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귀국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6자회담
 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⁴⁶⁾ 결국, 북한은 5월 22일 열린 두
 번째 북일 정상회담에서 다섯 명의 가족의 귀국에 동의하는 대신 인
 도적 차원에서 쌀 25만 톤과 1천만 달러의 의약품을 지원받았다. 김정
 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도 ‘조일평양선언’의 리행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을 약속했지만, 북일 “관계 개선의 진전 여부는 일본의 동맹국
 의 태도와 입장에 많이 달려있다”면서 미국을 견제했다.

첫 번째 정상회담과 달리 2차 정상회담은 합의문도 없는 1시간 정
 도의 짧은 회담이었으며, 납치피해자 가족의 귀국을 위한 원 포인트
 회담의 성격이 짙었다. 김정은은 ‘비정상적인 조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국적립장에서 결심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⁴⁷⁾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 선언이 북일 관계의
 기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행방불명자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받은 것
 에서 의미를 찾았다. 고이즈미는 앞으로 북한이 평양 선언을 준수하는
 한 일본은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 14일 국회에서 ‘특정선박입항금지법

45) 読売新聞政治部, 『外交を喧嘩した男 小泉外交二〇〇〇日の真実』(東京: 新潮社,
 2006), pp. 45~56.

46) 和田春樹, 『日朝交渉30年史』, p. 142.

47) 『로동신문』, 2004년 5월 23일.

안'이 성립해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제 현안을 해결해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평양 선언의 의미는 점차 퇴색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최고지도자가 국가기관에 의한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한 이상 북한은 일본의 조사와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김정일이 납치 문제 재조사를 약속한 것은 납치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것을 북한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지만, 그 뒤 북한이 전달한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진위를 둘러싸고 북일이 공방전을 벌이면서 정부 간 협의는 중단되었다.

4. 북일의 동상이몽(同床異夢), 핵과 제재의 함정(陷穽)

2006년 9월 아베 내각이 출범한 뒤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10월 16일 회의에서 '납치 문제의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하면서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진상규명 및 납치 실행범의 인도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며, 이를 북한에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09년 9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납치 실행범의 인도가 삭제되었다가 제 2차 아베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 25일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한 방침과 구체적 시책'을 결정·발표하면서 다시 복원되었다.⁴⁹⁾ 특히, 아

48) “日朝首脳会談後の記者会見(平成16年5月22日)”; 和田春樹, 『日朝交渉30年史』, p.151.

49) 寺林祐介,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に対するわが国の取組 - 拉致被害者5名の帰国から10年間の経緯,” 『立法と調査』, No. 334(2010); 寺林祐介,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に対するわが国の取組 - 拉致被害者5名の帰国から20年を迎え

베 총리는 10월 15일 국회에서 “나의 내각에서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평양 선언’ ‘불행한 과거 청산’ ‘국교 정상화’ 같은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북일 관계는 제재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교섭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교섭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압력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2차 북일 정상회담 후 8월, 9월 및 11월에 세 차례 개최된 실무자 협의회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어렵게 시작된 북핵 6자회담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어 2005년 1월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라고 발언한 것에 반발해 북한 외무성은 2월 10일 자 성명에서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과 함께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종할 뿐만 아니라 “가짜 유골 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담 거부 의사도 밝혔다.⁵⁰⁾

7월 26일 어렵게 재개된 4차 6자회담은 일시 중단을 거쳐 9월 13일 속개되어 9월 19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공동성명 제2항에서 북한과 일본은 “평양 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 사항의 해결을 기

て,” 『立法と調査』, No. 449(2022).

50) 『로동신문』, 2005년 2월 11일.

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⁵¹⁾ 이에 따라 11월 3일과 4일, 12월 24일과 25일 국장급의 북일 정부 간 협의가 열렸는데, 12월 협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납치 문제를 포함한 현안 사항 협의, 핵과 미사일 등의 안전보장 협의, 국교 정상화 교섭 등 세 가지 협의를 병행하여 열기로 했다. 2006년 2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첫 번째 포괄병행협정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은 평양 선언에 따른 '일괄 해결·경제협력방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반환과 함께 DNA 감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도 요구했다.⁵²⁾ 2007년 3월 7일과 8일(베트남 하노이), 9월 5일과 6일(몽골 울란바토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 부회'가 두 차례 열렸으나 일본은 '일괄해결·경제협력방식'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으며, 국교 정상화의 본질은 과거의 청산 문제라면서 '보상'과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 등에 관한 자국 입장을 되풀이하고 끝났다.

한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통해 북한이 위조지폐를 유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6자회담에도 암운이 드리웠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2006년 7월 5일(워싱턴 시간 7월 4일)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0월 9일에는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7월 15일과 10월 14일 결의 제1695호와 제1718호를 채택했으며, 후자에 의해 안보리 산하에 대북 제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 한 후인 6월 12일 결의 제1874호가 채택

51) 『조선일보』, 2005년 9월 20일.

52) 요코다 메구미 유골이 가져라는 일본 정부 발표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박은 2004년 12월 14일 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2005년 1월 24일 자 '조선중앙통신사 비망록' 참조. 『로동신문』, 2004년 12월 15일; 2015년 1월 25일.

되고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설치되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개의 제재 결의가 추가로 채택되었는데, 안보리는 11개의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핵실험 또는 기타 도발의 중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제재 이행 조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2006년 7월과 2009년 6월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물품 수입과 북한으로의 물품 수출의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해 2007년과 2010년부터 대북 수입과 수출이 각각 제로가 되었다.⁵³⁾ 2006년 10월 9일 북한에 의한 1차 핵실험 후 일본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는데,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 규제 조치를 확대하고, 인도적 목적이거나 10만 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 지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목적의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과 북한 기항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⁵⁴⁾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이 열린 이후 9.19 공동성명(2005년)과 이것의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2007년 2월 13일과 10월 3일 합의)로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의가 결렬되면서 회담은 중단되었다. 북한은 2013년 1월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으로 “6자

53) 伊集院敦·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ポスト「冷戦後」の韓国・北朝鮮經濟 — 經濟安保への対応 —』(東京: 文眞堂, 2023), p.173.

54)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이 취한 대북 제재는 寺林祐介,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に対するわが国の取組 — 拉致被害者5名の帰国から10年間の経緯,” p.95의 ‘자료 4’ 참조.

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조선반도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다.⁵⁵⁾

북한이 6자회담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한 뒤에도 북일 정부 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스톡홀름에서 송일호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약속하는 대신 일본은 북한에 대해 취했던 독자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스톡홀름 합의’라 불리는 것인데, 7월 북한이 포괄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발표하자 일본은 인적 왕래 규제와 금융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도 허용하기로 했다.⁵⁶⁾ 2016년 1월과 2월 초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2월 10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발표하면서 북일 정부 간 협의는 단절되어 스톡홀름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9월 20일 아베의 유엔총회 연설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물자, 돈, 사람, 기술의 차단과 제재의 엄격한 이행, 최대한의 압력을 중시했다. 또한, 2012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163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⁵⁷⁾ 북한은 중국과

55) 『로동신문』, 2013년 1월 24일.

56) 『로동신문』, 2014년 5월 30일.

57) 『令和5年版 日本の防衛－防衛白書』(防衛省, 2023), p.105.

러시아와 함께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되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뒤에 발간한 2007년판 일본의 방위백서는 “핵실험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는데, 2015년판 방위백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2016년 두 번의 핵실험을 하고 2017년 7월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인 8월 8일 각의를 통과한 2017년판은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이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 9월에 각의를 통과한 2019년판 방위백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판에서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한 북한이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⁵⁸⁾

반면, 2020년 7월 1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선제공격을 노린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운운하는 아베 정권의 ‘무분별한 위협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에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일본 방위비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방위력도 증강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이를 정당화하는 논거의 하나가 되었으며, 안보 문제와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일의 인식과 대응의 차이가 더욱 현재화함으로써 평양 선언도 형해화(形骸化)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전제 조건 없는’

58) 방위백서는 방위성 홈페이지의 아카이브, <https://www.mod.go.jp/j/press/wp/index.html> 참조.

북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한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의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베는 영원히 평양 문턱을 넘어설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2019년 11월 7일 송일호 대사 담화)라고 일축해 버린다.

5. 2022년의 도쿄와 평양, 그리고 그 후

2020년 9월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총리를 보좌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가 바통을 이어받아 정책 계승을 표방했으나 1년여의 단명으로 끝났다. 스가의 후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9월 24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리병덕 연구원은 스가 후임으로 누가 되든 “선임자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답습하려는 정치가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했다.⁵⁹⁾ 9월 29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는 10월 4일 총리에 취임했는데, 11월 13일 열린 ‘모든 납치피해자의 즉시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기시다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2022년 5월 29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6월 7일과 27일 리병덕 연구원은 북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이미 다 해결되어 북일 간에 납치 문제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⁶⁰⁾ 정상회담이 열리

59) 리병덕, “다시금 드러난 스가의 본색,” 조선중앙통신, 2021년 9월 25일.

60) 리병덕, “상투적인 정치사기극: 납치소동,” 조선중앙통신, 2022년 6월 7일; 리병덕, “너절한 반공화국납치소동으로 얻을것은 하나도 없다,” 조선중앙통신, 2022

면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며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양 선언 20년이 되는 2022년 9월 17일과 전날인 16일, 일본의 주요 신문은 일제히 사실을 통해 교착상태의 북일 관계 타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구체성이 결여하거나 모순되는 내용도 많았고 보수적인 신문일수록 북한에 대한 압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었다.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17일 자 『도쿄신문(東京新聞)』 사실은 평양 선언은 지금도 유효한 외교문서라는 전제에서 일본은 미국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유연한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이 평양 선언에 언급한 것은 9월 15일 자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대사의 담화를 의식해 서인데, 송일호는 북한은 평양 선언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준 ‘이정표’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일호는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배·보상을 바탕으로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한다는 평양 선언의 ‘기본 정신’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납치, 핵, 미사일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추악한 제재를 잇달아 취함으로써 평양 선언을 “백지상태로 만들고 두 나라 관계를 최악의 대결국면에 몰아넣었다”라고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한 뒤 북일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⁶¹⁾

년 6월 27일.

61) “小泉訪朝20年 拉致解決へ外交努力尽くせ,” 『読売新聞』(社説), 2022年 9月 16日; “日朝首脳会談20年 拉致問題膠着を打開せよ 理不尽への怒り共有したい,” 『産

반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로동신문』에 실린 일본 관련 기사는 18일 자에 실린 “일본에서 혈육 간의 살인범죄”라는 제목의 단신 기사 뿐이다. 송일호 대사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로동신문』에 실리지 않았고 북한 정부의 대외 발신 매체 역할을 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되었는데, 12월 20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공표되었다. 이 담화는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 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 관련 정책 3문서를 각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일본 정부는 국제질서가 증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담화는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전략 채택이 오히려 역내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담화는 일본의 재무장화와 재침 기도를 감싸고 부추기는 미국은 북한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와 국방력 강화를 문제 삼을 자격도 명분도 없으며,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구실로 일본이 재침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자국의 우려와 불쾌감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⁶³⁾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12월 중순 북한

經新聞』(主張), 2022年 9月 17日; “日朝宣言20年 柔軟外交で交渉再開を,” 『東京新聞』(社説), 2022年 9月 17日; “小泉訪朝20年 平壤宣言の原点に戻れ,” 『朝日新聞』(社説), 2022年 9月 17日; “日朝打開へ政府の重い責務,” 『日本経済新聞』(社説), 2022年 9月 17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송일호대사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년 9월 15일.

62)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해서는 박영준·조진구 외,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년 12월 20일.

은 ICBM급의 고출력 고체연료의 로켓엔진시험을 했다. 2023년에 들어와서도 1월과 3월의 ICBM급의 화성포-15형과 화성포-17형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것들은 일본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2023년판 방위백서는 북한을 “중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⁶⁴⁾

이런 가운데 기사다 총리는 2023년 5월 27일 납치피해자 가족 등이 주최한 국민대집회에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는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틀 뒤 북한이 박상길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 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박상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려고 덧붙였다.⁶⁵⁾

6월 27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리병덕 연구원은 납치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음에도 일본이 피해자 전원의 귀국 실현을 고집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식의 허망한 망상에 불과”하며,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 자국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⁶⁶⁾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 표명

64) 『令和5年(2023)版 防衛白書』, p.99.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2023. 5. 29.),” 조선중앙통신, 2023년 5월 30일.

66) 리병덕, “유엔은 주권국가를 모해하는 정치모략선전마당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9일 자 『아사히신문』은 2023년 3월과 5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동남아시아에서 북한의 노동당 관계자를 두 번 만났다고 보도했다.⁶⁷⁾ 11월 26일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제의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서는 북일 정부 간에 접촉이 이뤄지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2023년 12월 말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202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일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5일 노토(能登)반도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위문전문’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냈다. 2월 15일에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2월 9일)에서 현재의 북일 관계를 “대담하게 바꿔가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개인적인 견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김여정은 북한 지도부가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북일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도 않았다.⁶⁸⁾

조선중앙통신, 2023년 6월 27일.

67) 『朝日新聞』, 2023년 9월 29일; 鈴木拓也, 『北朝鮮・拉致問題の深層』(東京: 朝日新聞出版, 2024), pp.233~238.

68) 『로동신문』, 2024년 1월 6일; 조선중앙통신, 2024년 2월 15일.

2023년 5월 말의 박상길 부상 담화와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공통된 것은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움직일 생각은 없지만,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 의식과 실현불가능한 집념을 용기있게 접고”(김여정 담화)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준다면(박상길 담화)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김여정 담화)면서 일본 측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두 담화 모두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와 정당방위권(자위권) 차원에서 개발해 온 핵의 포기, 즉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점은 없다.

다만, 두 담화 모두 평양 선언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7년 8개월의 아베 정권 동안 평양 선언에 대한 북일 양국의 의미 부여는 점차 약해졌다. 2013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지마 이사오(飯島勲) 내각관방참여(고이즈미 총리의 비서관으로 두 번 평양 방문 수행)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영일 당 비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역사적인 평양 선언’이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동의 보물’인 “평양 선언의 이행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송일호 대사는 정부 간 협의 의사를 이지마에 전달하면서 납치 문제와 과거 청산을 둘러싸고 북한 사이에 견해차가 있어 회담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지마는 방북 결과를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지만, 아베의 반응은 신통치 않아 송일호에게는 전달했던 ‘회담기록’조차 아베 총리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⁶⁹⁾

69) 編集部·飯島勲, “初公開 2013年訪朝 北朝鮮首脳と「全7時間」極秘会談,” 『文藝春秋』

이지마의 방북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2014년 5월의 ‘스톡홀름 합의’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아베 시대에 들어와 평양 선언이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납치가 김정은과 직접 관계가 없어 ‘5명 생존, 8명 사망’이라는 2002년 9월의 북한 측 통보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라는 아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⁷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5일 앞둔 2018년 6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타협하는 것을 경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의 견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납치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해 주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아베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평양 선언이란 말을 처음 언급했는데, 아베는 평양 선언이 유효하며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강조는 필자)할 수 있다는 뜻도 트럼프를 통해 김 위원장에 전하고 싶어 했다.⁷¹⁾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정상외교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는 아베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는 ‘모기장 밖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아베는 전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2018년 7월과 10월에는 아베의 측근인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이 베트남과 몽

秋』, 第100卷 10號(2023), pp.94~147. 이지마가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 문제에 대해 유골 감정 전문가는 “누구의 유골인지 모른다(判明しない)”는 감정 결과를 내놨으나 가짜라고 잘못 보도되었다고 북한 측에 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70) 岩田明子, 『安倍晋三実録』, p.137; 安倍晋三, 『安倍晋三回顧録』, p.141.

71) 岩田明子, 『安倍晋三実録』, pp.104~105; 安倍晋三, 『安倍晋三回顧録』, pp.292~295.

골에서 북한의 당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 일본 측은 납치피해자의 귀국과 진상규명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평양 선언에 따라 ‘과거 청산’ 의향도 있다고 북한에 타진했다. 2019년 5월 이후 한국 정부를 통해서도 일본은 북일 양국에서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2002년의 평양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⁷²⁾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북일 간의 인식 차이는 명확했다.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며, 일본 측은 여전히 ‘납치피해자 전원의 즉시 일괄 귀국 실현’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납치피해자 가족회와 지원단체가 ‘납치피해자 전원의 즉시 일괄 귀국 실현’을 조건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의한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⁷³⁾

6. 결론

평양 선언은 북일 정상이 과거 청산과 현안의 해결을 통한 국교 정상화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역사적’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91년 1월부터 약 10년간 이뤄졌던 정부 간 국교정상화회담

72)鈴木拓也, “安倍官邸が主導する日朝秘密交渉の行方,” 『論座』, 2018年 11月 29日; 共同通信, “拉致解決へ連絡事務所, 政府 北朝鮮に設置打診 被害者の順次帰国も視野 東京五輪で受入協力,” 2018年 10月 14日; 共同通信, “新平壤宣言を打診 署名の名義変更を目指す 日朝首脳会談で安倍首相,” 2020年 2月 16日.

73) 『朝日新聞』, 2024年 2月 27日.

에서 평행선을 그었던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하는 것은 과거 청산을 통한 일본의 경제협력인데, 평양 선언은 일본의 경제협력은 국교 정상화 후에, 경제협력의 내용과 규모는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년 동안 유엔 안보리에서는 11개의 대북 제재 결의가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는 2019년 2월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은 11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가운데 5건의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담은 결렬되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일본의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평양 선언 이후 북일 양국 간에 평양 선언의 원칙과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2월의 시점에서 북일 어느 쪽도 평양 선언의 파기나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2023년 5월의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와 2024년 2월의 김여정 담화에 평양 선언 언급이 없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북일 관계 정상화는 불행한 역사 청산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3년 봄부터 북일 비밀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제2의 스톡홀름 합의로 그칠지, 아니면 제2의 평양 선언을 도출할 수 있는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민족차별이자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납치 문제에 관한 북일 공동조사 등의

조치를 대가로 일본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조선학교의 무상화에 합의하는 제2의 스톡홀름 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나아가 3차 북일 정상회담이나 제2의 평양 선언의 채택 가능성도 희박하기는 하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일 양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납치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나 안보 문제도 중요하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국 안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인식하지만, 북한도 “일본의 재무장화는 유엔헌장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2022년 12월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라고 우려한다. 북일 양국은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도 있다.

전후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한 배상이나 경제협력은 현금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했던 경제협력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일본국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을 10년간 제공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납치 문제에 관해 얼마나 성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동결과 감축 등에 합의함과 동시에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개설해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도 불가결하지만, 무엇보다 북일(정상)이 납치와 제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세카이(世界)』, 『분게이슌주(文藝春秋)』, 『주오고론(中央公論)』, 『Voice』 등 시사 문제를 다루는 월간 종합지를 면밀하게 살펴볼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들 잡지에는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고들이 많이 게재되어 일본 국민의 대북 이미지와 여론 형성, 나아가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필자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접수: 3월 6일 / 수정: 4월 5일 / 채택: 4월 1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정일, 『김정일선집』 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 신문

『로동신문』, 1965년 6월 24일; 1990년 9월 29일, 12월 18일; 1991년 1월 31일, 2월 1일, 3월 12일, 5월 21~23일, 7월 3일, 11월 20일; 1992년 1월 31일~2월 2일, 5월 15일, 11월 6~7일; 2000년 8월 25일; 2002년 9월 18일; 2004년 5월 23일, 12월 15일; 2005년 2월 11일; 2013년 1월 24일; 2014년 5월 30일; 2015년 1월 25일; 2024년 1월 6일.

3) 기타 자료

조선중앙통신, 2021년 9월 25일; 2022년 6월 7일, 6월 27일, 9월 15일, 12월 20일; 2023년 5월 30일, 6월 27일; 2024년 2월 15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대통령공보비서실, 『노태우 대통령 4년의 주요연설』(서울: 동화출판공사, 1992).

박영준·조진구 외,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일 교섭 30년』, 김윤형 옮김(파주: 서해문집, 2023).

2) 논문

강태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제2권 1호 (2004).

김용복, “한일회담의 경험과 북일수교회담의 전망: 공개된 한일협상자료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1권(2006).

도진순, “동북아 탈냉전의 고리, 북일 수교교섭의 역사와 한계,” 『한일역사 공동연구 보고서』, 제6권(2005).

유의상, “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일본 공간』, 제23호(2018).

윤경민,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78호(2022).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3) 신문

『조선일보』, 1990년 10월 9일; 1992년 1월 31일; 2005년 9월 20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高崎宗司, 『檢証 日朝交渉』(東京: 平凡社, 2004),

読売新聞政治部, 『外交を喧嘩した男 小泉外交二〇〇〇日の真実』(東京: 新潮社, 2006).

山本栄二, 『北朝鮮外交回顧録』(東京: 筑摩書房, 2022).

安倍晋三, 『安倍晋三回顧録』(東京: 中央公論新社, 2023).

岩田明子, 『安倍晋三実録』(東京: 文藝春秋, 2023).

鈴木拓也, 『北朝鮮·拉致問題の深層』(東京: 朝日新聞出版, 2024).

『令和5年版 日本の防衛 - 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23).

有田芳生, 『北朝鮮拉致問題: 極秘文書から見える真実』(東京: 集英社, 2022).

伊集院敦 ·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ポスト「冷戦後」の韓国·北朝鮮経済 - 経済安保への対応』(東京: 文眞堂, 2023),

増田剛, 『日朝極秘交渉: 田中均と[ミスターX]』(東京: 論創社, 2023).

和田春樹, 『日朝交渉30年史』(東京: 筑摩書房, 2022).

2) 논문

“[緊急座談会] 「小泉総理訪朝」への道程と日本外交,” 『国際問題』, No.512(2002年 11月號).

若杉美奈子, “1970年代前半における北朝鮮「脱陣営」外交と政策展開過程,” 『アジア地域文化研究』, No.13(2017).

小此木政夫, “日本の北朝鮮政策: 国交正常化交渉とその展望,” 『法学研究』, 第68巻 2号(1995).

松本英樹,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経緯と朝鮮半島をめぐる最近の動向,” 『レファレンス』, 平成 15年 8月号(2003).

太田修, “日朝平壤宣言から一年 - 植民地支配・戦争による被害の清算のために, 歴史学からの提言,” 『文学部論集』, 第89号(2005).

遠藤哲也, “<報告3> 日朝関係と国交正常化問題の現状と展望,”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特集号(2011).

稲原泰平, “日朝平壤宣言(2002.9.17.)の国際法上の意義,” 『金沢星稜大学論集』, 第36巻 3号(2003).

福原裕二, “日朝「平壤宣言」への道: 北朝鮮の「対日自主外交」の変容,” 『アジア社会文化研究』, 第5号(2004).

編集部・飯島勲, “初公開 2013年訪朝 北朝鮮首脳と「全7時間」極秘会談,” 『文藝春秋』, 第100巻 10號(2023).

寺林祐介,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に対するわが国の取組 - 拉致被害者5名の帰国から10年間の経緯 -,” 『立法と調査』, No.334(2010).

_____,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に対するわが国の取組 - 拉致被害者5名の帰国から20年を迎えて,” 『立法と調査』, No.449(2022).

鈴木拓也, “安倍官邸が主導する日朝秘密交渉の行方,” 『論座』, 2018年 11月 29日.

3) 신문

『朝日新聞』, 2002年 9月 3日, 9月 19日; 2022年 9月 17日; 2023年 3月 26日,

9月 29일; 2024年 2月 27日.

『読売新聞』, 2022年 9月 16日.

『産経新聞』, 2022年 9月 17日.

『東京新聞』, 2022年 9月 17日.

『日本経済新聞』, 2022年 9月 17日.

4) 기타 자료

“共同通信社社長書面インタビュー 金正日総書記の回答,” 2002年 9月 14日.

共同通信, “拉致解決へ連絡事務所, 政府 北朝鮮に設置打診 被害者の順次帰国
も視野 東京五輪で受入協力,” 2018年 10月 14日.

共同通信, “新平壤宣言を打診 署名の名義変更を目指す 日朝首脳会談で安倍首相,” 2020年 2月 16日.

The Pyongyang Declaration as History and North Korea-Japan Relations

Cho, Jingoo (Kyungnam University)

The Pyongyang Declaration is a document that records the results of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visit to North Korea in September 2002 and his summit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 Il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Pyongyang Declaration, signed by the leaders of Japan and North Korea, is the fundamental document that governs Japan-North Korea relations. They confirmed that it is in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to reconcile their unfortunate pasts, resolve pending issues, and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that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this paper, I reexamine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as history, and then consider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Japan and North Korea's recognition and responses to the Pyongyang Declaration, thereby explaining why the declaration was left unfinished.

Keywords: Pyongyang Declaration, North Korea-Japan relations,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Kim Jong Il,
Junichiro Koizumi, Japanese colonial rule, Japan's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im Jong Un,
Fumio Kishida